

# 與 “국회권한 조정해야” vs 野 “개헌보다 내란종식 집중”

우원식, ‘조기대선·국민투표’ 제안  
李 “합의할 수 있는 1차 개헌안은  
5·18 헌법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권영세 “예상 못한 제약적 국회 출현  
여소야대 구조 고착화 시 국정 마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조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던진 조기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에 정치권에서 썬범이 복잡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이 막강해 이를 개헌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만 1차 개헌하자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전날(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 권력구조 개편의 적기라며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구체적 개헌 사안 여야 합의를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외국민투표권 보장과 사전투표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의 제안은 친명(친이재명)계에는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백가쟁명식 개헌논의로 내란세력의 내란행위를 시선분산하거나 덮어버리

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자”며 “우리가 저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저들이 우리를 단죄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내란수괴가 아직 감옥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며 “내란뿌리부터 당장 뽑아야 한다”고 했다. 5선 중진인 이인영 의원도 “지금은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 불가능하다. 산술적으로 가능한 게 정치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대선을 앞두고 개헌논의를 잘못하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민의를 왜곡한다”며 개헌은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는 동의했어도 구체적 방향성이 완전하더라도 대선 전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시간이 많지 않아 합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했으나, 내란 종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선은 내란종

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합의할 수 있는 1차 개헌안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 요건의 강화 정도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 외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선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제약적 대통령제 폐해를 목도해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면서 “그러나 지

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약적 국회의 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개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 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며 “개헌은 여러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재촉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국민의힘, 친윤계 지도부 유지… 소장파 “이대로면 대선 백전백패”

지도부 ‘책임론’에도 재신임 추진  
오히려 탄핵찬성과 조치 필요성 거론  
尹 손절 않고 장외정치 시 대선 불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의힘이 친윤(친윤석열)계 지도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두 번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당한 국민의힘 108명 의원 중에서 소신껏 당의 혁신을 부르짖는 소장파 의원의 목소리는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날(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당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현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을 추진했다. 현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투톱’을 이루고 있다.

현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직전까지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며 당을 결집했으나,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탄핵 인용 선고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계·출당 요구와 지도부의 ‘책임론’이 일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선 오히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찬탄파(탄핵 찬성파)’ 김상욱·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조치 필요성이 거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도부에 관한 사항을 일임하기로 했다. 당은 조기 대선까지 두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대오를 단결해 반(反)민주당·이재명을 기치로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비대위원장이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고 가혹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지도부를 재신임하며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에는 계엄이 벌어진 이후, 부정선거와 ‘계몽령’의 광기 속에서 칼춤을 추며 당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탄핵 선고 이후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기 정치를 하는 무책임한 중진 의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야말로 정계의 대

상이자, 제거해야 할 고름이다. 당을 망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유우파’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로는 이재명의 선대위원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 아닌가”라고 당의 혁신을 요구했다. 윤상현·나경원·조배숙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비호하는 발언을 계속해왔다.

재선 강민국 의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당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잔가지인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넘어가면 선거에서 백전백패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손절하지

않고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장외 정치를 허용하는 순간 대선은 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후 조기 대선이 끝난 후에도 출당 및 제명 조치되고 있지 않다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2017년 11월 박 전 대통령을 직권으로 제명했다.

탄핵 찬성파이자 5선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자진 탈당설을 두고 “본인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당에 부담을 덜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태홍 기자

## 파면된尹, 퇴거 없이 ‘관저정치’ 지속

주말동안 국민의힘 주요인사 차담  
극렬 지지층 향한 메시지 발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나흘째인 7일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있다. 이제 대통령직에 있지 않으니 관저를 비워야 하는데, 퇴거에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한남동 관저를 떠날 예정이다. 구체적인 퇴거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경호 계획 수립 등에 시일이 걸려 더 빠르게 퇴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주말 동안 윤 전 대통령의 퇴거 소식 대신, 관저에서 국민의힘 주요 인사를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파면 선고 당일인 지난 4일 오후에는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차담을 했

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할 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인 지난 5일에는 나경원 의원을 만나 “어려운 시기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고맙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극렬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만 계속 발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당일인 4일과 6일 변호인단을 통해 지지층에게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이는 지지세력 결집을 토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사저로 돌아가더라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저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서예진 기자 syj@

##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내정

총 11명으로 위원회 구성

국민의힘이 7일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을 준비할 당 선거위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선관위원장직을 맡고, 이양수 당 사무총장이 선관위 부위원장을 맡는다. 선관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황우여 위원장 선임 배경에 “경선 관리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해서 다들 야시는 것처럼 수도권권 인선에서 5선을 하고 당을 위해 오래 봉사했던 황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